



승어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해초 지난 16일 제주시 추자면 하추자 신양항 내 내수면에서 주로 서식하는 승어때가 해염치는 가운데 일부 승어의 몸에서 마치 해초를 뒤집어 쓴 것처럼 자라 강회만자

제주도 재량지출사업 손질 본격

2차 추경 앞두고 2000억원 넘는 재정수요 확보 차원

10% 지출구조조정 원칙아래 사업별 재검토
 1만9000건 대상... 1200억원 절감 효과 기대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차 추경을 앞두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지출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재량지출사업의 10% 지출구조조정을 원칙으로, 사업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보조사업 등 자체사업과 국고보조사업 등 부서별 약 1만9000건의 사업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통해 약 1200억원 정도의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17일 제주도에 따르면 전례없는 재정 위기감에 예산절감(세출 효율화) 차원을 넘어 한정된 재원의 '선

택과 집중'을 통한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됐고, 최근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지출구조조정TF를 구성해 지출 구조 혁신에 나서고 있다. 도는 부서별 재량지출사업의 총액 10% 범위 내 지출구조조정 원칙 하에 사업별 심사를 진행하고, 사업 재검토 평가기준 리스트(필요성, 긴급성, 효과성, 효율성)에 따라 사업 감축 또는 지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최종 지출구조조정 대상은 6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집행잔액 최소화 원칙에 따라 집행잔액이 예상되거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감액 조정된다. 현재 2차 추경에 미반영된 전기차 구입보조금, 지방투자기업 입지·설비투자 지원 예산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체사업은 시급하지 않은 불요불급한 행사·사업과 현재까지 사업추진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사업은 중지하고, 지방보조금은 30% 지출구조조정 원칙하에 사업별 세부예산 내역을 검토해 낭비요인을 차단하게 된다. 이와함께 도는 향후 세입감소에 따른 세출구조조정 불가피성에 따라 부서별 예산편성·집행과 관련된 제도개선 과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한편 앞서 올해 초 제주도가 추경을 앞두고 진행한 재정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재정수요(잠정)는 275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보조사업 지

서귀포항에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 속도

도의회 행사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서귀포시 문섬 인근 해역의 생태계 보전 및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의 일환인 '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지난 15일 속개한 제38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해양레저 체험센터 건립)'을 원안 의결했다. 이 계획안은 오는 2023년 12월까지

173억원을 투입해 서귀포항만에 지상4층(건축면적 2400㎡, 연면적 4500㎡) 규모의 해양레저 체험센터 1개동을 건립하는 내용이다. 센터에는 다이빙 교육장과 스쿠버 쿠버 체험관, 장비 세척실, 인공 다이빙물, 전시관·홍보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양레저체험센터는 당초 자구리 공원 일대에 조성될 예정이었지만 주민 등의 반발을 샀고, 도의회는 지난해 9월 제376회 임시회에서 관리

계획안을 심사보류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사업예정지를 서귀포항만 내로 변경해 제출했고 이번엔 통과된 것이다. 해당 계획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확정된다. 한편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은 지난 2018년 11월 서귀포시 문섬 일대가 해중경관지구로 지정(해양수산부)되면서 국·도비 400억원이 투입돼 해양레저체험센터, 해상다이빙교육시설, 해상계류시설 등이 조성된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긴급재난지원금 이주지역 사용 가능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 수령 변경 불가 주의

코로나19 사태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 이주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1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3월 29일 이후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를 한 국민들도 이사한 지역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당초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국민은 세대주 주소지 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신용·체크카드로 지원받은 국민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한 경우 1회에 한해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 18일부터 시작되는 자치단체 신청을 통해 선불카드·지역사랑상품권을 받게 되면 타 광역자치단체로 이사하더라도 변경이 불가

하기 때문에 이 점을 각별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행안부는 이사한 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한 신청 절차·방법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치단체와 협의 등을 거쳐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께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소비하는 만큼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경감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근탁기자 haru@ihalla.com

"5·18,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결정적 상징"

문 대통령 "개헌 논의시 헌법 전문에 취지 되살아나야"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역사적 사실만으로도 광주 5·18이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의 결정적 상징"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광주MBC '5·18 40주년 특별기획-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에서 "5·18과 6월 항쟁의 이념만큼은 우리가 지향하고 계승해야 될 하나의 민주 이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앞으로 언젠가 또 개헌이 논의가 된다면 헌법 전문에서 그 취지가 반드시 되살아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헌법에 담아야 우리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제대로 표현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돼야만 5·18이 나 또 6월 항쟁의 성격을 놓고 국민들

간에 동의가 이뤄지면서 국민적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5·18 최우선 핵심 과제에 대해서는 "결국 과거의 그 아픔, 또 과거의 상처는 치유되어야 되는 것"이라며 "치유되어야 화해가 있고, 또 국민 통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출발은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는 것, 그 진실의 토대 위에서만 화해가 있고 통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내는 것도 폄하나 왜곡을 더 이상 없게 만드는 하나의 방법"이라며 "규명의 목적은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부미천기자 bu8385@ihalla.com

마늘수확 지원상황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18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농번기 일손돕기 수놓음 운동과 함께 도내 농업인 등 출금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 768억원, 계속비 사업 등 자체사업 추가 반영 필요사업 229억원 등이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심으로 고령농, 독거농, 장애농 등 취약계층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에서 농가 선정 후 인원 배정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기술원은 지난 14일 기준 농업인단체 및 품목농업인연구회 13개 회·186명의 자원봉사 인원을 확보했다. 이태운기자 lty9456@ihalla.com

한리일보 창간 31주년을 축하합니다

Creativity / Harmony / Donation

제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가는



청년들의 꿈을 발전시키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웃들과 더불어 노력하고 있으며,
 제주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